

역사학 연구와 기록

- 1990년대 후반이래 기록관리제도의 발달, 자료의 정보화와 한국현대사 연구 -

정 용 옥*

1. 머리말
2. 기록관리제도의 발달과 한국현대사 연구
3. 한국현대사 자료 수집, 관리, 활용 현황
4. 맺음말

주제어 : 현대사 연구, 문서관제도, 기록관리체계, 사료학 연구

1. 머리말

역사에는 종착역이 없지만 역사 인식체계에서 현대사는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고, 어쨌든 현대사가 정리되어야 역사 서술도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 즉 한국현대사가 정리되어야 한국사의 온전한 인식체계 수립이 가능하다. 또 현대사는 현행(current)하는 동시대와 역사가 직접 만나는 부분이고, 당대의 역사의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달리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대사를 통해 과거 역사를 보는 셈이다. 이런 면에서 현대사는 역사 연구와 역사 교육의 측면에서 다른 어떤 시대보다 중요하다.

현대사가 가지는 이런 특징은 현대사 연구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역사를 ‘한 공동체가 과거에 대해 공유하는 기억의 체계’라고 할 때 當代史, 同時代史(contemporary history)로서 현대사 교육의 어려움은 기억을 공유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동학농민전쟁의 역사적 성격이 ‘반제, 반봉건’이었다는 데 대해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동의할 수 있지만 한국전쟁이나 5·16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크게 다를 수 있다. 즉 현대사 해석에서는 개인적, 집단적 다양성을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른 시대사 연구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겠지만 현대사 연구는 다른 시대사 연구에 비해 특히 어려운 것 같다. 우선 조금만 시기가 바뀌어도 자료상황이 확연히 달라지는 데다 기본적으로 섭렵해야 할 자료가 매우 많다. 물론 신문 같은 기초자료가 있어서 시기별 흐름을 파악할 수 있지만 인식의 심화를 위해서는 연구자가 기자의 손을 거치지 않은 원자료를 직접 수집하고 정리해야 한다. 또 현재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그것을 연구에 수렴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해석이나 평가가 중요한 역사적 계기나 자료 공개상황, 대중적 인식의 변천에 따라 달라지는 인식의 가변성도 고려해야 한다.

*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한국현대사

일반적으로 현대사 연구자들은 다른 시대사 전공자들에 비해 훨씬 많은 자료들을 다룰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러한 자료의 양적 포화상태가 반드시 자료의 질적 가치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대사 자료의 존재양태를 보면 양적으로 포화상태에 있으나 유의미한 자료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사정은 현대사 연구자로 하여금 자료의 수집단계, 아니 생산단계에서부터 보다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자료를 다룰 것을 요청한다. 다른 한편으로 현대사 연구자들은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 어느 시대사보다 치밀하게 사료를 비판해야 한다. 즉 현대사 연구는 다른 어느 시대사 연구보다 기록의 체계적인 생산, 보존·관리, 활용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 현대사 연구의 발전은 문서관 제도와 기록학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현대사 연구에서 1980년대가 다양한 시각과 관점이 도입되고, 현대사 연구에 대한 대중적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대라고 한다면¹⁾ 1990년대는 현대사 자료가 크게 확충되고, 인식의 심화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특히 1990년대 후반 학계와 일반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기록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를 위한 개선노력이 경주된 것은 현대사 연구의 기초 토대를 재정비한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 글은 우리 사회에서 기록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확대된 1990년대 후반이래 한국현대사 자료수집 현황을 검토하면서 국내에서 기록관리 체계의 발달과 자료의 정보화가 한국현대사 연구에 끼친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리되지 않은 글이고, 필자의 체험과 주관적 인상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추후 보충할 필요성이 있음을 미리 알려둔다.

2. 기록관리제도의 발달과 한국현대사 연구

근대이후 각국의 문서관 제도 발달이 시민적 권리의 신장, 민주주의 제도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는 지적은 언술 자체로는 진부한 얘기가 되었다. 하지만 문서관 제도와 기록관리 체계의 수립과 개선을 위해 실천적이고 학문적인 노력을 배가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있는 우리 사회의 경우 문서관 제도와 기록관리체계의 확립 필요성에 대한 원론적인 지적은 재삼재사 강조될 필요가 있다. 기록보존 제도의 확립은 단순히 역사자료의 축적과 문화 발전에만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능률의 향상, 국민의 권익신장과 행정 민주화 달성 등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기록관리 제도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 신장과 참여민주주의의 발달은 상보상조 관계에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사회는 식민지 치하에서 자기 기록을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과 제도를 박탈당했고, 해방 이후 일제 잔재 청산에 실패했다. 또 독재체제 하에서 국민의 알 권리는 극도로 위축되었고, 독재체제의 영속을 위해 권력에 의한 자료의 고의적인 왜곡과 말살이 다반사로 일어났다. 이러한 사정은 합리적 기록관리 체계 수립 노력을 단순히 국민의 민주적 권리 신장 차원에 머물지 않게 만드는 역사적 배경으로 작용한다. 우리 사회에서 기록보존 제도의 수립이라는 과제는 국민 권익신장과 민주주의적 관행의 정착에서 나아가 과거사 청산과 개혁이라는 과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다시

1) 1980년의 광주민중항쟁과 이후 1980년대 민족민주운동의 발전은 한국현대사 연구 붐을 일으킨 현실적 계기가 되었다. 또 이 시기에 한국현대사 연구가 본격화하고, 한국현대사에 대한 대중적 수요가 확산되는 데에는 이른바 미국 학계의 수정주의적 연구성과들이 큰 역할을 했다. 이 때 번역된 수정주의 계열의 저서와 논문들은 그 동안 국내에서는 금기의 영역으로 연구 자체가 불가능했던 현대사에 대해 새로운 인식의 단초를 여는 역할을 했다. 1980년대 국내의 한국현대사 연구동향에 대해서는 이완범, 1989 『해방전후사 연구 10년의 현황과 자료』 『해방전후사의 인식』 4, 한길사 및 역사문제연구소 편, 1987 『해방 3년사 연구 입문』 까지 참고.

말하면 기록보존 제도의 수립은 우리 근현대사에서 일어났던 자료의 고의적 왜곡과 파손을 시정하는 기록 복원 작업과 맞물릴 수밖에 없다. 최근 친일인명사전 편찬 문제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 문제가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지만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할 때 현실적으로 필요한 일차적 작업은 관련자료의 확보가 될 것이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기록관제도의 수립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란은 기록관 제도의 확대와 과거사 청산 문제가 미묘한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례이다. 기록관리제도의 발달과 근현대사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통령기록관 설립이 필요하지만 기록관의 성격과 설립의 주체와 운영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짚어야 할 점들이 많다. 대통령기록관 설립이 자칫 과거 독재자의 행적을 미화하고 합리화하는 기념관으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에 민주화와 개혁이 시대의 화두가 되었을 때, 몇몇 수구언론에서는 오히려 이승만, 박정희 미화작업에 집요하게 매달렸던 것을 보지 않았던가. 한쪽에서 박정희 기념관 설립이 모색되고 다른 한편에서 민주화운동자료관이 설립되는 상황은 기록관 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의 기록관리제도 발달에서 1999년 1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그야말로 획기적인 일이었다. 이 법령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기록물 관리를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한국에 근대적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지 일세기가 지났지만 외세 지배와 분단 상황, 독재체제의 장기간 지속과 비민주적 관행의 고착 속에서 공공기록물에 대한 변변한 관리법령 하나 없었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주소였다면 역으로 공공기록 관리법령 제정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자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제도와 관행의 마련을 위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다.

2000년 1월 1일자로 공공기록 관리법령이 발효되어 이미 많은 시간이 경과하였지만 이 법령의 몇몇 조항이 연기되고, 중앙과 지방의 각급 기관에서 자료관 설치를 연기하는 등 이 법령은 여전히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령이 현실화되고 관행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하지만 이 법령의 제정이후 ‘민주화운동자료관’이 많은 시민운동단체와 개인의 지원을 얻어 최초의 민간단체 자료관으로 설립되었고, 기업의 경우도 기록의 체계적인 보존의 필요성에 눈을 돌리고 있으며, 특히 기업의 생존을 위한 전략수립을 위해서나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기록관리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 감지되고 있다. 또한 방대하게 쌓여 있던 종교단체와 각급 학교의 기록도 본격적으로 정리·보존되기 시작하여 다양한 민간 기록을 통해 우리의 역사상을 새롭게 조망해볼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²⁾

1990년대 후반 한국 사회의 기록관리제도 발달과정에서 기록학 분야가 새로 개척되어 학문적으로나 전문인력의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인 것도 특기할 일이다. 처음 기록관리 선진국의 이론과 제도를 소개하고 기록문화의 진흥을 추진하기 위하여 결성된 사단법인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은 이후 계속 발전하여 기록학의 체계화에 크게 이바지하였고, 한국기록학회는 이제는 중견학회로 발돋움하여 연 2회 전문학술지 『기록학연구』를 간행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 11개 대학원과 단기교육원에서는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문서관 제도가 수립된 뒤 기록학이 발전하는 것이 다른 나라의 일반적 경험이라면 우리 사회에서는 기록관리체계의 제도적 개선과 기록

2) 이원규, 「기록관리개혁의 현황과 전망」(2001. 8. 27), 한국국가기록연구원 홈페이지로부터 재인용

(<http://rikar.org/news2/column/index.php?mode=view&uid=116&no=44>)

학의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졌거나, 기록학의 학문적 정립을 위한 노력이 출현하고 강화되면서 이것이 역으로 기록관리체계의 정비를 추동하는 하나의 힘으로 작용하였다.

훗날 현대사학사를 정리할 때 1990년대 후반 기록관리제도의 발달은 한국현대사 연구의 기초토대 정비라는 측면에서 특기할 사항이 될 것이다. 지금은 당장 그 효과를 느낄 수 없지만 충실한 기록의 생산과 체계적인 보존의 1차적 수혜자는 다름 아닌 역사가학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가학자들이 현재의 기록관리제도 개선에 무심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시기 기록관리제도의 발달과 기록학의 발달은 역사 연구자들이 자료의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나아가 자료의 생산에 개입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를 제공해주었던 것이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으나 기록관리제도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우리 사회의 역사자료 보존과 관리, 활용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환기시키고 제고시킴으로써 근현대사 자료를 크게 확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여기에는 이 시기 추진된 한국사 관련 정보화 사업도 한몫 했다. 흔히 1980년대를 사상적으로 ‘질풍노도의 시대’로 부르지만, 이 시기 다양한 사상적 실험은 현대사 연구붐과 현대사 연구물에 대한 대중적 요구의 확대와 같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한국현대사, 특히 해방 직후사 연구에 자극을 주고 인식을 심화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이 1980년대 후반에 나온 두 질의 자료집, 즉 『한국현대사 자료 총서』(돌베개출판사)와 『미군정정보보고서』(일월서각 및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였다. 그리고 1990년대 들어서 국내 연구자들이 미국의 국립문서관 등 해외의 문서관을 직접 조사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 후반에는 개인들의 산발적인 해외 자료 수집이 국사편찬위원회, 국회도서관, 군사편찬연구소 등 연구·자료편찬 기관, 도서관들의 조직적인 자료 수집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기관들의 자료 수집·정리 사업이 확대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이 정부 주도로 1998년부터 시작된 한국사 관련 정보화사업과 2000년부터 시작된 국사편찬위원회의 ‘해외 소재 한국사 자료 수집·이전사업’일 것이다.

정부 주도의 한국사 관련 정보화사업은 밀접하지만 분리되어 있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산원에 의해 1998년부터 시작된 정보화근로사업이다. 그 중 한국사 자료의 정보화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외교통상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독립기념관과 국사편찬위원회의 사업들이다. 이들 사업은 주로 소장자료의 목록을 전산화하고, 자료 원본 이미지를 웹서비스 한다. 둘째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한국사관련 콘텐츠 개발의지가 표명된 ‘사이버코리아21’이라는 국책과제이다. 이 사업을 위해 정부는 1995년 8월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했고, 1996년 6월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각 기관별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했다. 이어 1999년 3월 기존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2002년까지 정부 각부처가 수행할 국책과제로 ‘사이버코리아21’을 확정했는데 이 가운데에서 국가지식정보구축의 중요한 분야의 하나로 한국학 및 문화재가 포함되기에 이르렀다.³⁾ 또 국사편찬위원회의 ‘해외 소재 한국사 자료 수집·이전사업’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모두 100억원을 들여 해외 소재 한국사자료, 민주화 관련 자료, 북한(통일)관계 자료를 수집·정리하게 되어 있다.

사실 1980년대이래 한국현대사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현대사 인식의 심화와 자료원의 확충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양자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 광주항쟁과 제4·

3) 역사정보화사업의 개요와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한상구, 2001 「한국역사 정보화의 방향과 과제」, 『역사학과 지식정보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참고.

3 연구이다.

광주항쟁 연구의 쟁점 가운데 가장 커다란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문제의 하나가 미국의 관여 여부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작전지휘권을 가진 미군이 한국군의 이동과 투입을 승인했는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의 하나가 되었다. 미국 정부의 공식입장은 미국의 연루를 부정하는 것이었고, 1989년 국회 광주특위에 「광주백서」를 제출하여 그러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그러나 『저널 오브 코머스』(Journal of Commerce)지의 기자 팀 서록⁴⁾은 정보자유법(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의해 미국 국립문서관에 소장된 국무부·국방부의 광주항쟁 관련 비밀전문을 공개하게 만들었고, 그 전문들에 의하면 미국은 ‘광주항쟁 당시 한국군 투입계획을 승인했고 백악관의 한 회의에서 직접 군사개입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는 것이다. 그가 수집한 자료들은 1997년 광주시 5·18사료편찬위원회에 의해 몇 권의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로 간행되었다.

제주4·3 연구 역시 역사 인식의 심화과정이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 책임자 처벌 등과 같은 현실적 과제의 해결, 역사 주체로서 민중들의 역사의식의 회복, 자료 원천(源泉)의 확대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즉 4·3 연구 자체가 불가피하게 4·3이 남긴 역사적·현실적 과제의 해결을 전제하고 있고, 역으로 후자의 해결은 4·3 연구의 심화와 자료 확충, 대중적 차원에서 역사의식의 확대를 돕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제민일보 4·3취재반에 의해 5권까지 발간된 『4·3은 말한다』(전예원, 1994~1998)는 4·3의 진상을 광범하게 조사하고 이를 집대성함으로써 보다 풍부한 사실적 근거 위에서 4·3을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 2000년 제주도의회가 『제주4·3자료집-미군정보고서』를 간행한 이래 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자료집이 속속 간행되었다.

최근 들어 각 기관의 자료 수집 사업과 정보화사업으로 인해 현대사 자료가 크게 확충되었고, 그 활용방식 또한 진일보하였다. 그리고 기록관리제도와 기록학의 발달은 자료 연구와 과거의 기록관리제도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킴으로써 사료학 연구를 촉진시키는 자극제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연구조건 변화상과 그것에 대한 현대사 학계의 대응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한국현대사 자료 수집, 관리, 활용 현황

먼저 최근 각 기관의 현대사 자료수집 현황부터 살펴보자. 근현대사 자료 수집에 성과를 보이고 있는 기관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ㄱ. 공공기관

국사편찬위원회

국회 입법조사국(도서관) 수서과 비도서자료실

국사편찬연구소(* 군사 및 한국전쟁 관련자료 중심)

정부기록보존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 관계자료 중심)

독립기념관(* 독립운동 관계자료 중심)

4) 팀 서록의 아버지는 선교사로 순천 지방에서 선교활동을 했고, 그 역시 어린 시절을 순천 지방에서 보냈다.

외교안보연구원, 외무부 외교사료과

국립중앙도서관

국토통일원 자료실(* 북한 노획문서 소장)

* 위 기관들 가운데 국사편찬위원회와 군사편찬연구소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비교적 많은 편. 자료의 정리·편찬사업은 국사편찬위원회가 활발.

나. 사설기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경남대 극동문화연구소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현대한국학연구소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언론기관

KBS, MBC 등 방송국(* 영상 및 음성 자료 중심)

* 사설기관들 가운데에 가장 많은 국외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 편찬도 가장 활발한 곳은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주요 수집 대상기관은 미국 국립도서관.

이들 기관의 2002년도 수집실적을 보면 국사편찬위원회는 미주지역에서만 문서 723,937장, 지도 769점, 마이크로필름 24,891컷·148롤, 사진 1,245장을 수집하였다. 국립도서관은 일제강점기 국내 미소장 조선총독부 간행물자료를 172종 173책 수집하였다. 정부기록보존소는 미국으로부터 1950-60년대 한미 경제관계 기록물을 약 50,000장 수집하였고, 북경시당안관 소장 한국관련 자료를 22,512컷, 학습원대학교 소장 총독부 문서를 4,357컷, 추밀원회의의사록 96권을 수집하였다.⁵⁾ 첫눈에 보아도 대부분의 기관이 최근에는 수만 장에서부터 수십만 장에 이르기까지 매우 방대한 양의 문서를 해외에서 들여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기관의 근현대사 자료 수집·정리 취지나 방식, 수준이 상이하고, 수집 대상물이나 수집기관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이 의미하는 바를 일률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들다. 다만 이들 기관 가운데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수집 자료를 전산화하여 인터넷 상에서 제공하고 있는 만큼 기관별 수집·정리 현황을 비교하기 위해 이들 기관이 인터넷상에서 제공하는 정보화된 근현대사자료들의 내용과 제공방식을 살펴보자.

아래 표에서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그리고 정부기록보존소와 같이 도서관 및 문서관 역할을 하는 기관들은 소장도서 및 문서들의 검색과 열람의 편의성을 디지털방식을 통해 극대화하는 것이 정보화사업의 주된 출발이다. 국가보훈처와 독립기념관은 기관의 존립목적에 충실한 차원에서 그 목적과 관련한 자료들을 정리, 가공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면 역사자료 편찬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기관은 국사편찬위원회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정도이다.

이 표는 각 기관의 자료 정리도를 보여주는데, 한 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든 자료군이 자신의 제공 자료에 대하여 디렉토리 접근은 고사하고 일괄 목록리스트조차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많은 자료군이 색인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도 똑같이 그 색인어의 리스트가 제공되고 있지 않

5) 국사편찬위원회, 「2003년도 해외소재 한국사자료 수집·이전 관련 유관기관 실무자 협의회」(2003. 3. 13) 회의자료

다. 이것은 자료의 편찬을 운위할 단계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서, 마치 도서관이라고 하면서 소장자료의 목록카드조차 비치하지 않고 이용자를 부르고 있는 것과 같다. 또 제공 자료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들어있는 유용한 정보제공의 역할을 해야할 범례조차도 전체적으로 빠져있다.⁶⁾

제공된 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제공되는 대규모 자료들이 거의 대부분 일제 식민지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인데, 한반도에서 생산되고 현재 남아 있는 자료들 가운데 개항기나 해방이후보다 일제시기의 것이 공사 모두 단연 우세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시기의 것은 미국 국립문서관 소장자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⁷⁾

해방이후 현대사에 한정한다면 국내 기관들 가운데 비교적 자료원(資料源)에 가까이 접근해 있고, 해외 자료의 활용도가 높은 곳은 국편이라고 할 수 있다. 국편 소장자료는 포괄하는 시기와 주제라는 측면에서 해방직후 시기나 정치, 외교, 북한, 남북관계 등에 치중되어 있다. 반면 국회도서관은 1960년대 이후 외교문서를 많이 수집하였다. 군사편찬연구소는 군사적 내용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이 부문에서 내용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그 자료들을 자료집 형태로 출간하기 이전에는 제대로 열람할 수 없어 자료 열람과 이용의 편이도라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많다.



<표 1> 기관별 근현대사 자료 정보화의 내용과 제공방식⁸⁾

6) 한상구, 「근현대 정보화자료의 연구 활용 방안과 과제」 『한국역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성과와 그 활용사례』 (2003. 7. 11), 4쪽.

7) 위의 글, 5~6쪽.

8) 위의 글, 3쪽으로부터 재인용.

제공 기관명	자료군	분량	자료제공방 법	검색 방법	범례 유무	디렉토리 유무
국가 보존처	애국지사 공적조서	8천여 명분	보존처 공적 조서내용	이름, 운동계열, 출생지, 서훈내역, 내용	×	×
	경남항일관련 신문기사색인	1만여 신문 기사제목	파일제공	-	○	-
국립중앙 도서관	구한국 및 조선총독부 관보	18만여 건	원문이미지	단일 검색창	×	×
	1945년이후 단행본자료	4300만면				
	1945년 이전 신문자료	106만건				
	1950년 이전 연속간행물	17만여건				
	1945년 이전 일본어자료	1700여만면				
	1945년 이전 한국관련외국어자료	300만여 면				
국사편찬 위원회	신문	7만 면	원문이미지 및 색인어, 기사분류표 제공	각 아이টে이블 상세 검색창	○	○
	잡지	1천만 자	원문텍스트 및 색인어, 기사형태분류 제공			
	근현대 주요 문헌	20여 종	원문텍스트 제공			
	근현대 주요 문서 자료	5만 면	원문이미지 및 색인어 제공			
국회 도서관	해외소재 한국관련자료	50여만 건?	원문 이미지	수록자료명, 목차, 저자, 키워드/형태, 소장처, 본문언어	×	×
독립 기념관	독립운동관련 마이크로필름	?	색인어 및 원문 이미지	단일 검색창	×	△
	원문정보제공 자료	?	원문 텍스트 및 이미지			
정부기록 보존소	구한국 및 1945년 이후 정부 문서 등	문서 58만 여건 등	목록만 제공	기록물명, 생산기관	×	×
	조선총독부 문서 등	문서 88만 여건 등	목록만 제공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 연구소	구한국외교문서	색인어 28만개	원문 이미지	단일 검색창 및 색인어 검색	×	×
	식민지시대연구자료	?	원문 이미지			

기관별 근현대사 자료 수집, 정리 현황을 정리해보면 우선 제공된 자료의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일제 식민지기가 대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해방이후의 경우 신문·잡지와 같은 기초자료가 정보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매우 아쉽다. 수집대상지역을 보면 국내보다는 일본, 미국으로부터 수집한 자료가 훨씬 많다. 수집대상 지역의 편중성은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이것은 왜곡된 한국근현대사가 자료의 존재형태에 반영되어 나타난 현상일 따름이다. 다만 그러한 자료의 존재양태에 안주하고, 국내에서 자료수집 노력을 소홀히 할 때는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지금 시점에서 자료수집의 편중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기관간에 중복 수집이 발생하거나, 수집주체들에게 자료원에 대한 유용하고 실제적인 정보가 없어서 자료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없을 때이다.

다른 한편으로 자료의 공개도나 열람의 편의성이라는 문제도 지적되어야 한다. 기관별로 자료 공개 정도가 다르고, 어떤 기관의 자료들은 하드카피 형식으로 출판되기 전까지는 일반인이 자료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 주제영역에 따라 어떤 자료들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국편의 ‘해외 소재 한국사 자료 수집·이전사업’의 수집대상 가운데 북한(통일)관계 자료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국편이 미국 국립문서관에서 수집한 한국전쟁기 미군이 북한군으로부터 노획한 문서들을

편찬한 『북한관계사료집』은 여전히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1990년대 후반이래 자료수집 사업은 그 이전 개인 위주의 간헐적이고 산발적인 자료수집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가 한층 조직적으로 자료수집에 힘을 쏟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임에 틀림없다. 또 그러한 자료수집 사업이 정보화사업과 연결됨으로써 개인이나 기관의 자료 독점을 벗어나 자료 이용을 대중화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자료수집 사업은 개선해야 할 점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사업이 자료의 정리와 공개, 활용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그것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방대한 수집량에 비해 정리, 공개, 활용의 정도가 매우 낮은 것이다. 진지한 정리작업은 물량적 공개라는 압박감에 의하여 왜곡되고 부실하게 되거나, 아니면 거꾸로 일괄 공개를 목표로 가운데 그 최소한의 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도적이든 아니든 형식적인 정리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 전반적인 연구역량의 부족도 한몫하고 있다. 검색과 활용을 위한 적절한 도구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쏟아져 들어오는 자료들은 무의미한 종이뭉치나 전산기호들의 집합에 불과할 것이다. 어떻게 수집, 정리, 활용 사이의 시간적 지체를 극복하고, 수집자료들을 유용한 사료로 만들 것인가에 현단계 자료수집, 정리 사업의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인 해결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선 기초자료 구실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선별해서 하드카피 상태로 출판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적절한 자료 소개와 함께 종이문서 상태로 편집해서 연구자들에게 열람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 자료의 디지털화를 위해서라도 자료 안내, 소개나 구체적인 범례의 작성 등 자료에 대한 정보 제공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록물의 경우에는 낱장에 들어 있는 내용보다 그 내용을 포괄하는 맥락(context), 생산배경 등에 대한 정보가 기초적으로 중요할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런 정보를 제공해주는 검색도구(Finding Aids)의 데이터베이스가 검색에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⁹⁾ 목록은 검색도구 가운데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지만 수집된 자료들의 목록화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다. 목록, 기술(description), 해제, 색인 등과 같은 기본적인 기록검색도구가 시급히 완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검색도구를 만드는 작업은 연구자들이 자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전반적으로 수집, 정리 사업이 전적으로 실무자들에게 맡겨져 있는데, 학계가 효율적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고, 실무자들도 학계의 역량을 활용하고 학계와 교섭할 수 있는 항상적 통로를 개설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양자 사이에 정보 소통이 시급해 보이는데, 사업주체들이 전자저널, 소식지, 통보(Bulletin) 등의 형식으로 사업 추진상황을 그때그때 공개하고, 학계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이를 사업 추진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현대사의 자료적 기반이 어느 때보다 크게 확충되는 추세에 따라 자료 연구 또는 사료학이 크게 발달한 것도 1990년대 후반이래 현대사 학계의 큰 특징이다. 첨부하는 최근 발표된 한국현대사 관련 자료 해제 목록을 보면 현대사 자료 연구는 단순한 자료 해제의 단계를 넘어서 한국현대사의 주요한 자료원(資料源)인 국내외 기록관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수집을 지향하고 있다. 그간 현대사 학계에서도 실용적 목적에서 자료 소개와 해내외 문서관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었지만 최근 들어 그러한 경향은 증가하고 있다. 줄져 『미군정 자료 연구』(선인, 2003)는 필자의 문서관 현지조사(Archive Research) 경험을 외화한 것이다. 이 책은 문서관 현지조사를 위한 통로를 마련하고, 주요 자료군을 소개한다는

9) 정혜경, 2000 「해외소재 한국학관련 역사기록의 정보화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창간호, 166쪽.

실용적 목적과 사료비관을 통해 외국 자료들에 내재한 시각·관점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를 결합한 것이다. 최근 자료수집 기관에서도 단순한 수집목록 작성 차원에서 나아가 외국의 자료원(資料源)과 수집대상 문서관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이를 체계화하기 시작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¹⁰⁾

자료 및 기록에 대한 체계적 연구의 확산은 현대사 학계에 한정되지 않는 역사학계 전반의 경향인데, 『기록학연구』에 실린 최근의 관련논문 목록들을 일별 하면 이러한 사정을 쉽게 알아챌 수 있다.

- 윤훈표, 「조선초기 공기록물(公記錄物) 관리제(管理制)의 개편」 (2호, 2000. 10)
- 오향녕, 「실록(實錄): 등록(騰錄)의 위계(位階)」 (3호, 2001. 4)
- 김도형, 「일제하 총독부 박물관 문서와 관리체계」 (3호, 2001. 4)
- 이승일, 「조선총독부의 조선도서 및 고문서의 수집 분류 활동」 (4호, 2001. 10)
- 박성진, 「일제하 조선총독부의 공문서 분류방식」 (5호, 2002. 4)
- 이경용, 「한말 기록관리제도 연구」 (6호, 2002. 10)
- 조경구, 「고문서 정리에 대한 기록학적 연구」 (7호, 2003. 4)
- 방일권, 「러시아 기록물 분류체계의 발전 : 러시아국립역사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7호, 2003. 4)

이러한 연구들은 기록학의 발달이 역사학 연구에 일정하게 자극을 주었음을 반영한다. 한국에 기록학이 소개된 초창기에 기록학 연구에 매진한 사람들이 주로 역사학자였다는 사정도 작용했겠지만 이 논문들은 역사학자들이 기록학 연구를 통해 축적한 지식을 다시 사료 연구에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기록학의 발전이 사료학의 발전에 자극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종래 역사 연구에서 사료학 분야가 주로 사료의 텍스트 비평에 의존하는 문헌학, 고증학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데 비해, 위의 논문들은 사료의 생산과 보존, 관리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사료학의 분석 영역을 넓히고, 자료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4. 맺음말

1990년대 후반이래 기록관리제도의 발달은 현대사 연구를 위한 기초토대 축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 역사학자들이 기록학 분야에서 학문적 수련을 통해 얻은 경험은 역사학 연구에서 가장 후진적인 분야로 남아 있던 사료학 분야의 발달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 틀림없다. 이제 그간의 경험을 평가하면서 역사학과 기록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고, 새로운 분업과 협업의 과제들을 추출해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료 수집 사업은 수집 방법의 효율성 제고, 자료 정리·관리 방법의 개선, 활용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고, 그것의 상당 부분은 연구역량의 축적과 기술실무적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현재 기록 문제와 관련해 역사학, 특히 현대사 분야가 좀더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자료의 수집, 정리 문제라기보다 자료의 생산과 보존에 개입하고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것은 현재의 기록관리제도 개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미래의 역사 연구 수준은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양질의 자료를 생산하고, 보존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10) 2002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온 『일본소제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 I 및 『미국소제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 I~III 참고.

공공기록물 관리를 위한 자료관 설치나 현재의 공공기록물 생산·보존 시스템 개선은 양질의 자료를 생산·보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테고, 역사학 분야에서는 그 외에도 현대를 표상하고 증거하는 다양한 자료들의 생산을 위해 머리를 짜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종이신문이 인터넷신문으로 점차 대체되는 상황에서 인터넷신문이나 그 외에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각종 전자 정보, 디지털 정보를 어떻게 수집, 보관,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도 기록학적인 관점에서 점검되어야 할 것이고, 영상자료의 중요성이 점차 중요해지는 사정을 감안할 때 그것의 효율적 관리방안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또 최근 활성화되는 구술자료의 수집, 보관, 활용을 위한 구술자료 아카이브의 설치와 같이 자료원 확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학제간 연구를 통해 계급·계층별 의식상태나 생활상태를 시계열적으로 조사해서 축적함으로써 일반인의 생활이나 생활감정에 밀착한 자료를 생산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첨부>한국현대사 자료 해제 목록

1. 한국현대사 자료 개황 및 지역별 소장 현황 조사

서대숙, 이완범 외, 2001, 『북한현대사 문헌연구』 백산서당
국사편찬위원회, 2002 『일본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 I
국사편찬위원회, 2002 『미국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 I~III

김기석, 1997, 「미국내 한국관계 자료 연구」 『국사관논총』 73집, 국사편찬위원회, 과천, 87쪽~126쪽
량기백, 1991, 『미국내 한국관련기록 및 서류목록(영문판)』 한국국제교류재단

- 方善柱, 1986, 「미국의 한국관계 현대사자료」 『한국현대사론』(한국사학회 편), 을유문화사
- 方善柱, 1987, 「미국내 자료를 통하여 본 한국 근·현대사의 의문점」 『아시아문화』 제2호,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 서중석, 1997, 「현대사 사료의 문제」 『국사관논총』 73집, 국사편찬위원회, 과천, 51~85쪽
- 신복룡, 2000, 「書評 : 분류사학은 사료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 한국현대사의 재조명」 『정신문화연구』 7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서울, 239~256쪽
- 윤덕영, 「해방 직후 신문자료 현황」 『역사와 현실』 16호, 한국역사연구회, 341쪽~379쪽
- 李完範, 1997, 「한국현대사 자료의 정리 현황과 활용 방안」 『한국근현대사연구』 제7집, 한국근현대사연구회, 서울, 130~155쪽
- 李油東, 1988, 「韓國現代史資料의 整理現況과 意味」 『民族知性』 23 (1988. 1), 민족지성사, 178~184쪽
- 이혜준, 2001, 「근·현대 지방사료 수집의 방향과 과제」 『熊津文化』 제14집 (2001. 12), 공주 향토문화연구회, 45~58쪽
- 이흥환, 2001, 「미국은 지금도 '한국 X파일' 제작 중 : 현대사는 물론 주요인사 신상까지 꼼꼼히 기록... 통치사료조차 미비한 우리와는 대조적」 『주간동아』 제266호 (2001. 1. 4), 동아일보사, 60~61쪽
- 林大植, 1998, 「한국 近現代 人物 관련 情報의 活用 方案」 『國史館論叢』 제79집, 국사편찬위원회, 과천, 135~163쪽
- 지수걸, 2001, 「한국 근현대 지역사 서술체계와 활용 자료 : 충남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론』 32, 국사편찬위원회, 과천, 305~338쪽
- 崔根泳, 1997, 「국사편찬위원회의 사료수집현황과 과제」 『국사관논총』 73, 국사편찬위원회, 과천, 1~29쪽
- 山極晃, 1980, 「現代朝鮮史の史料に ついて」 『經濟と貿易』 (橫濱市立大學經濟研究所), 第129號

2. 문서관(아카이브) 소장 자료 소개

- 국사편찬위원회, 2002 『일본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 I
- 국사편찬위원회, 2002 『미국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 I~III
- 정용욱, 2003, 『미군정 자료 연구』 선인출판사
- 方善柱, 1986, 「鹵獲 北韓筆寫文書 解題 1」 『아시아문화』 창간호,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춘천, 41~156쪽
- 方善柱, 1987, 「美國 美24軍 G-2 軍史室 資料 解題」 『아시아문화』 제3호,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77~273쪽
- 方善柱, 1998, 「美國 國立公文書館 國務部文書概要」 『國史館論叢』 제79집, 국사편찬위원회, 과천, 257~280쪽
- 신복룡, 1997, 「미국에 소장된 한국현대사 자료수집의 문제점」 『기록보존』 10호, 총무처 기록보존소, 서울, 67쪽~78쪽
- 李根洙, 1997, 「미국국립문서관의 주한미군정 略史관련 자료의 분석」 『京畿史論』 1(1997. 3), 경기대 사학회, 107~139쪽
- 이상일, 1998, 「미 의회도서관 소장 한국 근대사 관련자료 소개 : 국사편찬위원회 수집자료를 중심으로」 『史學研究』 55·56 (1998. 9), 한국사학회, 897~908쪽
- 이완범, 2000, 「부록 2 미국 내셔널 아카이브 소장 한국전쟁 때 노획된 북한문서 해제」 『한국전쟁 : 국제전

- 적 조망, 백산서당, 서울, 222쪽
- 정병준, 1994, 「미국내 한국현대사 관련자료의 현황과 이용법 -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을 중심으로 -」 『역사와 현실』 제14호, 한국역사연구회, 서울, 281쪽~312쪽
- 조영렬, 1997, 「트루만 기념도서관의 한국현대사 자료」 『建大史學』 9 (1997. 12), 391~408쪽, 건국대 사학회
- 최유식, 1995, 「미국 대통령도서관 소장 한국 관련 자료 현황」 『역사와 현실』 제17호, 한국역사연구회, 서울, 244~261쪽
- 櫻井浩, 1980, 「朝鮮戰爭における 米軍の『捕獲資料』について」 『アジア經濟』 第24卷 第3號
- Hong N. Kim, 1979, *Scholars' Guide to Washington, D.C. For East Asian Studies (China, Japan, Korea, and Mongolia)* (Washington, D.C.: Smithsonian Inst. Press), 1979, pp.97-109
- Hong N. Kim, 1987, "U.S. Archival Materials in Washington, D.C. for the Study of Korea," *Korea Observer* 18-2, Summer 1987
- Jack Saunders, "Records in the National Archives Relating to Korea, 1945-1980," Bruce Cumings ed. *Child of Conflict: the Korean-American Relationship, 1943-1953*
- (* 책 선더스의 이 논문은 『한국전쟁과 한미관계: 1943-1953』 (청사, 1987년)에 「미국립문서처의 한국관계자료」라는 제목으로 실려있음)
- Dea-Sook, Suh. 1978, "Record Seized by U.S Military Forces in Korea 1921-1952," *Korean Studies Vol. 2*,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3. 주제별 자료 소개 · 안내 · 해제

- 정용욱, 2003, 『미군정 자료 연구』 선인출판사
- 方善柱, 1991, 「美軍政期の 情報資料 : 類型 및 意味」, 『한국현대사와 美軍政』,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 方善柱, 1992, 「1946년 북한 경제통계의 일 연구」 『아시아문화』 제8호,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춘천, 179~222쪽
- 方善柱, 1992, 「美國 資料에 나타난 韓人 ‘從軍慰安婦’의 考察」 『국사관논총』 제37집, 국사편찬위원회, 과천, 215~246쪽
- 방선주, 1999, 「韓半島에 있어서의 美·蘇軍政의 比較」 『미군정기 한국의 사회변동과 사회사 I』,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춘천, 27~52쪽
- 이준식, 1998, 「일제시대 사회통계 1 - 인구 - 」 『한국현대사연구』 제1권 제2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성남, 1~39쪽
- 장병욱, 2002, 「박정희는 북한을 치려했다 : 역대 대통령 통치사료 1,300여 건 발견, 한국 현대사 재조명할 자료들」 『주간한국』 제1906호 (2002. 1. 24), 한국일보사, 22~23쪽
- 정용욱 외, 2002, 『해방 전후사 사료 연구』 I·II, 선인출판사

4. 자료(집)해제

- 정용욱, 2003, 『미군정 자료 연구』 선인출판사
- 井村哲郎 編, 1997, 『1940年代の東アジア文獻解題』, 아시아經濟研究所
- 김광운·정병준, 「주한미군 정치고문 문서 해제」 『大韓民國史資料集』 18집, 국사편찬위원회, 과천
- 정병준, 1995, 「해제」 『韓國關聯海外史料所藏目錄集 (1. 美國篇)』, 국사편찬위원회, 과천
- 정병준, 1996, 「해제」 『大韓民國史資料集 28집 ; 李承晩關係書翰資料集1 (1944~1948)』, 국사편찬위원회,

과천

- 정병준, 1996, 「해제」 『美軍CIC情報報告書 1~4』, 중앙일보 현대사연구소, 서울
- 정병준, 2000, 「해제 : 駐韓 美24軍團의 對韓 軍政計劃과 軍政中隊·軍政團」 『韓國現代史資料集成』
47집(美軍政期 軍政團·軍政中隊文書), 국사편찬위원회, 과천
- 정병준, 2001, 「해제」 『NAPKO Project of OSS : 재미 한인들의 조국 정진 계획 (海外的 韓國獨立運動史料
24, 美洲篇 6)』, 국가보훈처, 서울
- 정병준, 2003, 「해제」 『미국무부정보조사국 한국관련보고서』 국사편찬위원회, 과천
- 정용욱, 1993, 「해제」 『JOINT WEEKA』 전8권, 영진문화사.
- 정용욱, 1999, 「해제」 『5·16과 박정희 정부의 성립』 1·2, 현대사연구소 자료총서 1·2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K C I